

#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허태희(선문대학교)

---

## 논문 요약

독립이후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산업화에 매진하였던 우리 한국의 주변상황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독선과 강압으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며 타민족을 적대시하였던 19세기 민족주의 논리는 더 이상 통일가치로서 보편성을 잃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도 지나치게 민족중심이거나 배타적 편애한 과정이라기보다 주변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통일도 그저 한반도의 지리적 재결합이 아닌, 국경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정서, 그리고 현실인식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이제 한반도통일이 좁은 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이나 현재의 시간대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하고 시대와 공감하며 인류사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통일의 의미에 평화와 나눔, 타인에 대한 관용, 물질적 이해와 편견을 넘어서 이룩되는 공감의 영역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한국의 안보이념으로 홍익안보론은 새로운 대안안보론으로서 구성주의 시각에서 조명한 새로운 성찰의 산물이다.

주제어: 한반도통일, 통일담론, 안보이념, 홍익사상, 인류 보편적 가치, 평화와 번영, 통일한국, 구성주의

---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전후 국제질서(Post-War International Order)를 주도했던 東西冷戰이 종식된 이래 20여 년이 지났다. 탈냉전 이후 강대국들 간의 전쟁 가능성은 줄었지만 인종 간의 분쟁과 국지전, 국제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기아와 빈곤, 질병과 인권탄압으로 주변부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 중동의 내전과 혁명,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세계는 여전히 혼돈스럽고 불안하다. 독립이후 한국사회는 전쟁과 분단, 독재와 탄압의 어두운 시기를 거쳐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성공의 역사를 쓰면서 한국사회는 세계에 발전의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쪽인 북한의 낙후된 경제와 군사모험주의로 인하여 지속된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한반도 상황도 여전히 불안하며 불확실하다. 주변국가간의 역학관계 변화와 군비증강, 해양영토 분쟁 그리고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통일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이념논쟁이나 분열상으로 인하여 통일과정 자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통일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매우 지난한 과정으로 만들 것이다. 대외적으로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구조와 오랜 남북분단 상황 및 북한의 고립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은 통합의 어려움을 상정하지만 이 문제는 통일을 단지 우리 민족 간의 민족적 재결합이나 배타적인 통합과정으로 추구해야하는가 하는 편애한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한다. 지난 20세기 초 식민지배 이후 독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도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독선과 강압으

로 국민을 강요하고 전쟁으로 내몰며 무조건 타민족을 증오하거나 적대시하였던 19세기 식 자민족 중심주의나 국수주의 논리는 더 이상 세계화시대의 통일가치로서 보편성을 잃어 가고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통합해버리는 민족만의 사건이나 지리적 재결합의 의미를 넘어 우리 통일이 세계사에 의미가 있고 또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승화될 수는 없는 것인가? 즉 우리가 준비하고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나 방향이 지나치게 우리 민족중심이거나 배타적·편애한 과정이라기보다 우리의 주변과 소통하며 공감하여 세계역사에 나름 의미를 던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sup>1)</sup> 한반도의 통일이 이 좁은 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이나 현재의 시간대를 넘어서 더 큰 의미로 세계와 소통하고 시대와 공감하며 인류사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작용하여 통일의 의미에 평화와 나눔, 타인에 대한 관용, 물질적 이해관계와 편견을 넘어서 이룩되는 공감의 영역은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한민족의 장기적 평화변영을 위한 이념적 정향을 탐구하여 대내적으로는 화해·상생을 통한 사회통합과 한민족 공동체의 변영을 담보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세계평화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통일국가’로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외교안보 가치를 구성주의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 II. 통일담론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선진 통일한국’의 비전 연구

### 1. 기존 통일담론의 특징과 한계

1) “통일을 보편가치로 승화하자.” 『문화일보』 2004년 3월 11일

제작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문제”를 제기한 이래로 최근 “통일비용문제”와 “통일한국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분단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문제가 계속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통일담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세’ 문제 및 ‘통일국가’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①처음 예상보다 독일통일 20년의 성공적 평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각<sup>2)</sup>에 기인할 수 있으며 ②진보정권 10년간 추진되었던 대북포용정책의 “분쟁관리”적 성격의 문제로 인한 새로운 통일담론의 전환필요성<sup>3)</sup> 일수도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고려한다면 ③여러 가지 대북정책 추진환경의 악화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및 내부상황 악화, 주변 통일여건의 변화 등등- 및 대북정책추진의 담보상황으로 인한 좌절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통일담론을 새롭게 본격화하거나 공론화한다는 것이 그 취지가 무엇이며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가 통일을 당연한 민족적 가치로 여기고 미래의 당위적 목표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통일국가문제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최근의 우리 한국사회에 만연된 사회내부의 갈등요인과 이념적 분열상, 여기에 남북 간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군사대립과 분쟁의 개연성, 주변 국가 간의 미묘한 역학관계변화와 같은 국제적 여건을 두루 고려한다면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즉, 우리 한반도가 처한 국제적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남북한 사회 내부의 시대적 변화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남북한사회의 자체 내부 화합, 남북

2) Wrobel Ralph Michael, “독일통일의 성과.”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pp.11~31..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학성, “통일세 논의와 통일문제의 공론화.” 『2010 제2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 (2010년 11월 5일), pp. 31~53. 과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를 참조할 것.

간 평화적 통합,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이며 조화로운 소통관계가 함께 담보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향의 모색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안에서 분단 이후 우리사회가 겪은 참혹한 전쟁과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군사독재문화와 민주화 과정은 나름 우리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우리사회의 통일문제인식이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팽배된 통일문제 인식이나 통일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현상(Status Quo)중심적이며 현재시점에 집착한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sup>4)</sup> 즉 현재의 질서 보존이나 기득권 보호적 성향이 강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단정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통일담론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여 정치적 이슈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갈등을 촉발하기 쉽고 감정적으로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통일의 궁극적 목적이나 가치 또는 미래 후손에게 있어서의 통일의 의미나 중요성 등은 간과한 채 주로 경제적 또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sup>5)</sup> 넷째 기존의 통일담론 대부분이 주로 정치 및 경제구조와 같은 상부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토대를 이루어야 할 하부구조, 즉 도덕적/문화적 공감영역을 소홀한 점이 있다. 통일한국의 정치 및 경제구조의 정립에 집착하

4) 통일문제 및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몇몇 주목할 연구로는 김학성, “통일세 논의와 통일문제의 공론화.” 『2010 제 2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 (2010년 11월 5일),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이태환, “통일한국의 안보외교: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1999.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허태희, “한반도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의 국방개혁.” 『국제지역연구』, 제 11권 제 1호, 2002. 문경인·이동윤, “남북한 통일의 유형별 시나리오.”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서울: 오름, 2002. 박영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등이 있다.

5) 김학성, “통일세 논의와 통일문제의 공론화.” 『2010 제 2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 (2010년 11월 5일), pp.31~53.

여 통일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문화적 측면에서 발전하는 진화적 측면을 간과한 점이 큰 것으로 물리적 통합(Integration)에 주력한 반면에 화학적 통합(Reconciliation)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일담론은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다양성 및 관용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통합문제가 이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대북정책 및 통일논의가 사회통합과 화합의 장애 또는 분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통일담론의 활성화에는 이보다 더 자기 성찰적이며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

## 2. 독일통일의 교훈과 미래지향적 통일담론의 필요성

통일문제의 인식은 먼저 인식의 주체에 따라 다르다. 즉 누구의 시각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직업별(기업인, 학생, 공무원, 전문직), 연령별(20~30대, 40~50대), 성별(남녀), 지역별(영남, 호남, 경기강원), 민족별(다문화사회 진입), 종교별, 이념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과거 역사적 시각, 현재시점, 미래 통일 시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통일과정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점진적/급진적, 장기적/단기적, 흡수적/합의적, 평화적/군사적 등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통일문제 인식의 다양성 및 복잡성문제는 통일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공론화하거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그 자체로서 갈등적/분열적 성향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통일문제의 공론화가 처음 기대한 것보다 통일의지의 회복이나 적극적 통일외교 및 통일대비를 통한 통일역량의 강화로 나타나기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이념적 대립이나 분열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장애할 수 있는 역작용의 요소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정책입장(대북정책)차이만으로도 심각한 이념적 대립과 갈

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 공론화를 통해서 더욱 진화하기 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의 갈등과 분열의 내홍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일문제 공론화를 회피하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일문제의 성격과 파장 및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통일담론의 방향을 좀 더 냉철하고 현명하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성찰적으로 고민하고 미래를 내다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독일통일 20년의 성과와 교훈을 살펴보면 주요 성과로서 ①완전한 자주권 회복, ②1국 1체제로 인한 국민적 화합과 자긍심, ③인구 8천만 명이 넘는 규모의 경제 달성, ④문화적 유산 확대 등등이 지적된다.<sup>6)</sup> 반면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독일통일의 교훈으로서

1. 통일을 잘했다-즉 실패라기 보다 성공작이다  
(Ralph Michael Wrobel).<sup>7)</sup>라는 평가
2. 동독사회의 개혁프로그램보다 자체 변화욕구와 서독체제로의 지향성<sup>8)</sup>이 중요
3. 통일로 인해 배태되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과 갈등적 요소의 관리 중요성<sup>9)</sup>

6) Wrobel Ralph Michael, “독일통일의 성과.”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pp.11~31.

7) “독일통일 그 후의 이야기” 『한겨레』 2011년 2월 25일. “통일비용과 그 후의 수많은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통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제가 많았지만 역시 통일하기를 잘했다, 그 외의 대안은 없었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통일 이후 태어난 신세대 일수록 분단이 빛은 정신적·심리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정상 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8) 위의 글. “구조적인 조건만큼이나 행위 당사자의 의지도 무시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적 계기를 맞아 그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 보면, 유연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도 통일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과거 동방정책의 덕이 컸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브란트가 추구했던 바와 같이 조건 없는 긴장완화 효과를 오래 축적해 놓은 바탕 위에서, 만일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9) 위의 글. “통독을 지켜봤던 어떤 한인 2세 독일시민은, 통일이 되어 독일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와 같은 소수자가 갑자기 소외되고 주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필자에게 고백하였다.”

4. 동독체제의 좋은 유산 및 제도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이에 대한 반성<sup>10)</sup>
5. 통일국가의 정치경제적 구조이상으로 도덕/복지적 인간개발 아젠다의 중요성 등을 예로 든다.

한때 천문학적인 통일비용과 통합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다지 매력적으로만 보이지 않았던 독일통일이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 통일독일이 정상궤도로 다시 진입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데 새로운 자각과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된다.<sup>11)</sup>

특히 과거 독일통일을 지켜보면서 막대한 통일비용 걱정으로 우리 사회가 통일기피증 또는 통일의지를 상실한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사고로 통일문제를 접근하였는가 하는 자성에 빠지게 된다. 독일통일사례가 주는 역사적 교훈과 우리의 대내외여건을 고려한다면 통일담론의 새로운 전개방향은 먼저 이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 내부는 물론 북한과 주변국들까지 포함하여 갈등요인이자 분열요인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선진 통일국가의 논의에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며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통일담론도 작은 원심

똑같은 현상이라도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는 이처럼 큰 인식의 격차가 나올 수 있다. 통일이 또 다른 배타적인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통일이 보편적 의미를 부여받으려면 '우리 민족끼리'를 넘어선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복수의 '통일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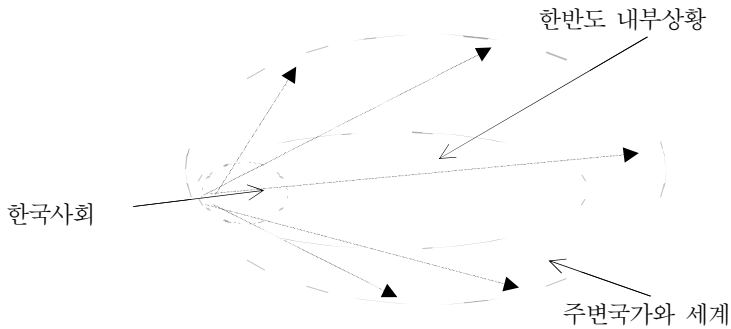
10) 위의 글. "서독 출신으로 『뉴욕 타임스』에서 일하는 카트린 벤홀트 기자는 동독의 팽창하던 사회정책조차 통일 후 깡그리 무시되었다고 지적한다. 보편적 유아보육 시설 덕에 동독 여성들은 더 일찍 결혼하고 더 많은 아이를 낳았으며 더 많이 취업할 수 있었다. 지금도 유아보육 제도는 옛 동독 지역이 낫다. 전공이 다른 의사들이 함께 모여 진료하던 동독의 폴리클리닉 제도 역시 서독의 의료계가 재발견하고 있는 제도다. 최근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시찰하러 갔던 독일 교육당국은 핀란드가 애초 동독의 교육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11)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Ralph Michael Wrobel, "독일통일의 성과,"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pp. 11~31.



에서 큰 원심원의 방향으로 펼쳐나가면서 더 관용적이며 소통적이고 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up>12)</sup> 우리의 통일이 작게는 남한사회 내부의 통합으로부터 북한과의 통합, 주변국과의 화합이라는 3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1> 통일한국의 대내·대외적 통합과 소통의 필요성



### 3. 미래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상황과 선진 도덕적 가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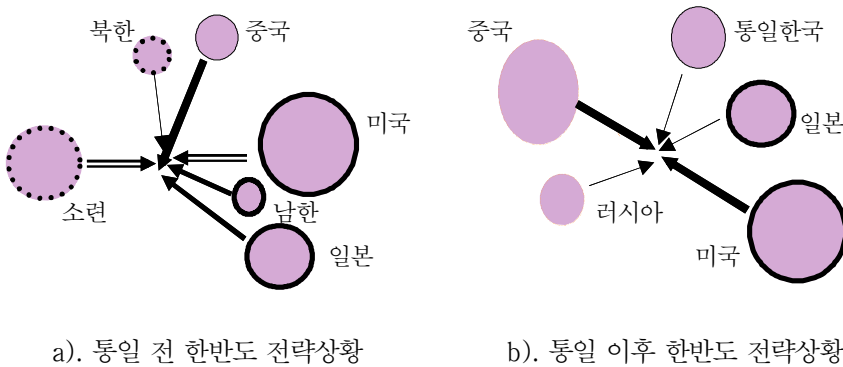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①동서냉전구조와 ②주변 4강 구조, 대내적으로 ③남북분단 구조와 ④권위주의 체제 등<sup>13)</sup>이다. 그 중에서도 냉전구조는 1990년대 세계적인 탈냉전의 조류와 함께 거의 다 해체되었지

12) 이런 문제의식으로 통일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① 통일과정이나 상황을 미래 시점, 새롭게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본다면 통일시대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②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상황을 제 3자의 입장, 특히 이웃 주변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③ 통일이 달성된 이후 일단 선진통일국가를 지향할 때 과연 세계에 도덕적 귀감이 될 가치나 규범이 우리에게 있는가?

13) 한반도정세와 관련 구조적인 요인의 설명을 위해서는 오기평, 『한국외교론: 신국제질서와 불확실성의 논리』, 서울: 오름, 1994.를 참조할 것.

만 한반도만 유일하게 북한의 고립주의로 인해 해빙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통일과정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 안보전략상황은 이런 과거의 유산에 의한 영향보다는 계속해서 변하는 주변 4강구도의 역학관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통일로 인한 대외상황의 변화로서 긍정적인 측면은 현재 통일독일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대외적 자율성의 확대이다. 이것은 주변국들이 통일이전의 반쪽 한국에게 대해 향유할 수 있었던 외교적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대신에 통일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크게 증대됨을 시사한다.

<그림 2> 통일이후 주변국의 역학관계 및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



그러나 이런 대외적 자율성의 증대가 남북분단구조가 해체되고 단일통일 국가가 성립되면서 초래되는 긍정적인 점이긴 하지만 또 다른 과급효과로 인해 더 큰 고민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즉 통일한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상대적 역학관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일한국의 위상은 통일 전보다 훨씬 더 강대해지고 커지는 반면에 주변국가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4강구도의 역학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롭게 강대해진 통일한국의 탄생에 일본과 러시아가 경계하고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또한 세계적인 전략구도의 변화문제로서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중국 또한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5, 6 위권의 통일한국의 등장은 역내 동아시아 세력균형은 물론 글로벌 전략환경 및 안보동맹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전략환경과 관련하여 통일 전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에 기초하였던 한반도 동맹구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이 친미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는 친중경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입장에서 중립을 지향할 것인가?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게도 중요한 전략문제이겠지만 미래 통일한국으로서도 여간 고민스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것이 대외적 상황의 문제라면 통일 이후 한반도가 처한 새로운 대내적 상황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친 대내적 변수로 남북분단 구조와 권위주의 체제 구조가 있다. 그중에 남북한 사회의 권위주의 문제는 남한의 민주화 진전과 이행으로 인해 남한에서는 급격히 해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북한사회의 권위주의 체제는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세습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더 강화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종전과 함께 확정된 남북분단의 상황은 향후 통일과정이나 미래 통일상황 이후에도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 남아 통일한국의 내부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4)</sup>. 통일로 인하여 통일한국의 대외적 자율성은 증대되겠

14) 2000년대 남북관계 패턴은 지난 반세기동안 남과 북이 강대국간의 전개된 이념분쟁을 자신들에게 내면화시켜 확고하게 구축하였던 적대적인 냉전구조를 마침내 종식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적응과 수용의 관계(Relationship of Accommodation and Recognition)로 제도화시켜 나가는 단계였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발전에 가장 장애적인 요소였던 한반도 냉전구조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남과 북은 2차 대전 이후 강대국들이 만든 냉전구조 속에서 체제안정과 생존을 위한 '제로-섬 게임'을 전개해왔으며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반복으로 표출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초 탈냉전의 조류에 밀려 점진적으로나마 상호적응의 단계로 들어갔다.

지만 대내적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되어 대내통합과 사회안정에 국력을 집중해야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독일이 통일 이후 한동안 대외적 문제보다 대내문제와 사회통합에 진력해야했던 상황과 유사한 것이다. 오랫동안 단절되고 격리되었던 남북한의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차이 극복문제 그리고 언어적/문화적 차이의 극복문제 등은 통일한국이 겪어야할 심각한 사회통합문제로서 대내 자율성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외교적으로도 친미적인 남한사회와 친중적인 북한사회의 사고차이문제를 노정시키면서 대내적 자율성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sup>15)</sup>

결국 통일한국이 직면할 이러한 대외 전략환경의 변화와 대내 자율성의 약화는 통일국가로서 한국이 과연 기존의 외교전략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안보이념에 매달려야하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전혀 새로운 국제정치구도와 안보전략상황에서 과거 외교수단인 동맹국 의존외교를 답습하거나 민족국가 중심적인 안보전략이 통일 이후에도 바람직한 것인가? 19, 20세기식 편협하고 이기적인 군사강국주의와 자국중심적 안보논리로 주변국가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대외적 자율성의 증대로 인해 보다 독자적이며 중립적인 외교공간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면한 사회통합과 화합의 문제로 인하여 대내적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인정할 것이며 다함께 공생하고 공영하자는 통일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적극 포용할 것인가? 통일 이후의 한반도상황과 통일한국의 변화된 위상, 대내적 통합문제 등등을 고려한다면 통일 전 남북 양측이 추구 하였던 강대국-의존적이며 수동적/경직된 대외전략보다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외교 자율성의 확대와 상생적인 도덕적 가치모색에 초점을 둔 규범외교전략이 더 유용할 수 있다.<sup>16)</sup> 통일 이후 갑자기 강대국으로까지

15) 허태희, “부시공화당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 『극동문제』 제 7권 1호, 2001, pp.40~64.

부상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군사안보적인 논리와 물리력에 토대를 둔 외교전략보다 이웃국가들이 공감하는 선진 도덕가치의 실현을 강변하는 규범외교가 주변국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훨씬 더 신축적이고 포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후반기 어느 시점이 되었든 통일된 한국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통일과정의 역사를 배우고 성찰하면서 통일한국의 미래 방향좌표를 논의할 때 앞서 살아간 선조들이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였더라면 훨씬 더 현명하였으며 통찰력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외교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나 방향이 너무 지나치게 현재의 우리입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우리 민족중심이어서 배타적인 과정으로서 준비하기보다 우리의 주변 및 세계와 소통하며 공감하고 세계역사에 나름대로 의미를 던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프랑스혁명이 단지 프랑스 국민들만의 문제를 넘어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듯이 남북통일도 단순한 한민족 간의 재결합이나 지리적 통합의 범주를 넘어 세계적 보편가치로 승화될 수는 없는 것인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통합해버리는 민족만의 사건이나 지리적 재결합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 통일이 세계사에 의미가 있고 또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서 승화될 수는 없는 것인지?<sup>17)</sup> 그런 이념적 가치나 정향들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통일과제이자 책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반도라는 협소한 지리적 공간이나 현재의 시간대를 넘어서 더 큰 의미로 세계와 소통하고 미래와 공감하며 주변과 어울리는 더 큰 가치로서 승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열린 통일의 궁극적 의미에는 평화와

16) 김상배,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국가전략』 제 17권 3호, 2011, pp.5~40.

17) “통일을 보편가치로 승화하자.” 『문화일보』 2004년 3월 11일.

나눔, 타인에 대한 관용, 물질적 이해관계와 편견을 넘어 인간개발의 아젠다를 제안하고 이룩하는 공감의 영역 등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것이다.<sup>18)</sup> 물론 이런 시도가 단순히 세계사에 자신을 부각시키고 싶다는 허영심의 발로이거나 모방이 아니며 무모한 이상주의적 공론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어쩌면 이런 이상주의적 접근이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우리 내부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해 낼 수 있는 더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일한국의 미래 외교비전을 도출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한민족과 주변국들이 함께 공생하고 공영할 수 있는 이념적 정향을 제시하는데 더 바람직하며 대내외적으로 화해상생할 수 있는 “선진 통일국가”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청사진을 밑그림으로 하여 향후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외교안보 이념과 도덕적 가치를 모색해본다.<sup>19)</sup>

### III.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 1. 주요 안보이념과 정책적 함의

한반도 주변의 상황과 시대변화의 조류를 고려할 때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아우를 수 있으며 통일상황시 보수와 진보, 우리와 주변세계 간 소통을 통해 공감의 영역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사에 의미가 있을만한 보편적인 가치로서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은

18) “통일을 보편가치로 승화하자.” 『문화일보』 2004년 3월 11일.

19) 김학성, “통일세 논의와 통일문제의 공론화.” 『2010 제2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 (2010년 11월 5일), pp.31~53.

무엇인가? 특히 통일한국이 북한주민을 성공적으로 포용, 동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민족 공동체의 단합과 번영을 위해서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외교의 이념적 방향은 무엇이고 세계화 시대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귀감이 될 외교안보적 이념이나 가치는 무엇일 것인가?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으로서 먼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국제정치학에서 이미 지배적인 학문사조로 자리매김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급진주의와 구성주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현실주의는 가장 연원이 오래된 학문사조로서 안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군사안보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국제정치학에서 발전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정치 패러다임이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실주의는 국가사회를 무정부상태로서 인식, 약육강식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냉엄한 현실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위협에 대한 자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안보강화차원에서 자조(self-help)를 통한 군사력 강화가 절대적인 가치이자 목표로 간주된다. 국가가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국력을 극대화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중심적 세계관이며 냉정한 국익(National Interest)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실주의의 안보정책 처방은 세력균형, 패권추구, 타협정책(Accommodation) 등으로 나타나며 주요 안보외교도 절제(Restraint)와 신중(Prudence)을 강조한다.<sup>20)</sup>

반면에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라는 현실주의적 논리에 반대의 입장에서 있는 자유주의적 관점은 오히려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라기보다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무정부상태이고 국가행위자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정치행위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물리적인 힘(Power)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상황이 국제정치현상의 이해에 더 적실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의 상황에 주목하는 자유주의는 외교이슈간 연계성의

20) 이동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pp.1~13.

활용과 다양한 정책수단의 강구(안보와 경제의 연계성 이용)를 강조하면서 안보론적 관점에서 집단안보체제 및 협력안보를 처방한다. 그리고 주요 안보 외교로 다자주의적이며 상호주의적인 외교(GATT, WTO)와 포괄적 안보외교를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sup>21)</sup>

급진주의는 사실 맑스-레닌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 국제사회를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계급구조측면에서 바라본다. 자본주의체제라는 거대한 세계경제체제(The World-Economy System) 내에서 선진 중심부지역이 저개발 주변부 지역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이용하는 경제적 종속상황과 불평등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체제 자체의 변화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sup>22)</sup> 급진주의가 세계정치를 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안보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굳이 관련성을 갖는다면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수단인 국가의 안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변부 지역이나 노동의 운명과 안위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sup>23)</sup>

마지막으로 최근 구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구성주의 시각은 국제관계에서 물리적 힘의 작용보다 관념의 힘의 작용을 강조하여 기존의 국제정치시각이 아닌 신사고로 전쟁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신뢰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을 역설한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자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으로써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도 당시의 국제규범, 지배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유도하자는 것이다.<sup>24)</sup> 역사적으로 냉전의 종식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시각에서 쉽게 설명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고르

21) 이근욱,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pp.14-34.

22)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23) Ibid.

24) 최종건,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pp.35-52.



바쇼프를 포함한 당시의 신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킨 신사고(New Thinking)의 역할이 냉전종식에 컸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물로서 규범의 역할은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행위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은 제한하고 특별한 행동은 허용 또는 촉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25)</sup> 이 구성주의 시각은 안보론에 인식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바 모든 국가의 군비증강이 문제가 아니라 왜 적국의 군비증강이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론적 기제의 중요성, 즉 위협의 인식은 관념, 생각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26)</sup>

한편 국제정치의 안보론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안보수준에 따른 안보딜레마 문제이다. 즉 안보수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체제안보, 국가안보, 개인안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안보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긴장관계가 초래한다.<sup>27)</sup> 만약에 현재의 세계체제 안보에 중요한 안보위협이 체제 내에서의 핵확산과 국제테러의 확산문제라면 국가안보차원에서는 당연한 국가적 위협-영토분쟁, 침략 대응-이 될 수 있으며 개인안보차원에서는 국민개인과 직접 연계된 문제로서 국민의 물리적 안전과 자율성의 유지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을 징병하여 전쟁에 나서게 하면 그 국가안보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개인안보는 희생될 수

25) 즉 촉구에서 받은 사용하되 손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한 태클은 경고 또는 퇴장, 인권차원에서 난민학살은 국제적 비난 및 제재를 받고, 환경파괴나 오염도 통제되며 중동의 제스민 사태처럼 국내정치탄압, 박해도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종건,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pp.35~52. 참조.

26) 이들 국제정치이론들은 안보위협의 대응방안에 다른 시각과 처방을 가능케 한다. 즉 현실주의가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남한의 핵억지력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한다면 구성주의는 북한의 핵개발이 자체 안보위협의 대응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인식, 국제적으로 북한의 위협인식요소를 제거해주고 NPT 체제복귀를 통한 핵폐기방안을 설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최종건,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pp.35~52.를 참조할 것.

27) Patrick Morgan 저, 민병오 역, 『국제안보: 쟁점과 해결』, 서울: 명인문화사, 2011.

밖에 없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조장한 탄압, 폭력, 간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재산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연 어느 안보수준이 우선적이어야 하는 것인가가 딜레마가 된다. 이처럼 대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세 가지 수준의 안보에서 긴장관계가 조성되며 안보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는 안보론 중의 하나인 인간안보론을 살펴보면 이 안보론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1994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나타난 개념이다.<sup>28)</sup> 이 개념의 발전에는 비판안보연구의 기여가 큰 데 그 핵심요지는 인간개발 및 발전에 저해가 되는 모든 요소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간안보론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간안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보스니아 내전 개입사례 및 중동의 자스민 혁명 개입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국제주의(Neo-Internationalism)라는 이름하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약소국 내정간섭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보개념은 행위자의 유형별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국가안보론은 사실상 절대 안보론적인 시각으로서 적대국의 희생과 파괴, 약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며 자유주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집단안보론은 상호안보적인 개념으로서 타국의 안보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목표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차원에서 상호안보론은 최근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안보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안보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공동안보론의 개념까지 발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념적 연원은 비록 자유주의사상에 기초하였지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28) 안보개념의 정의와 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용섭, 『한반도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를 참조할 것.

29) 위의 책.

안보위협과 인식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세계안보를 추구해야한다는 구성주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세계안보론(World Security)을 살펴본다.

## 2. 대안안보론으로서 세계안보론의 함의

세계안보(World Security)론은 기본적으로 안보위협의 인식이나 안보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론과 상당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94년 마이클 클레어와 다니엘 토마스(Michael Klare and Daniel Thomas)에 의해 발표된 세계안보론의 핵심요지는 공동안보와 포괄안보의 실현을 위해 전세계시민들이 공동으로 행위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고 지켜나가면서 국가안보론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으로서 주요 행동강령으로 상호호혜성, 형평성, 환경유지성, 민주화, 탈군사화 등을 제안한다.<sup>30)</sup> 구체적으로 세계안보론은 대안안보이론으로서 공동안보와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공동안보론은 과거 안보개념의 주체인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신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서 기존의 국가안보 중심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개개인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sup>31)</sup> 즉 과거 냉전시대 동서 대결 구조하에서는 적대국과 우방국의 편가르기식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군사안보우선 논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지향

30) Klare, Michael and Daniel Thomas, *World Security: Challenges for a New Centu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p.21-112.

31)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1863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부터 시작한 국제적십자의 규약과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국민들의 안전도 보호해야한다고 규정한 국제유엔 헌장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초 세계질서가 국가들 간의 긴장 및 대립으로 침체하게 전개된 냉전상황에서 탈냉전상황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안보관으로서 공동안보론(Common Security), 협력안보론(Cooperative Security) 등의 대안안보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대안 안보론으로서 인간안보론(Human Security)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환용섭, 『한반도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적인 안보논리는 강대국중심으로 짜여진 세계 기득권 질서와 군사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경제·복지문제보다 군사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냉전식 안보논리로서 세계핵전의 위험보다 국지전이 증가하고 경제·문화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많은 쟁점에서의 조정과 협력이 중시되는 탈냉전시대의 안보협력이론으로는 적실성을 상실한 논리라는 것이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구축하는 이론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냉전논리를 극복하고 탈냉전논리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탈냉전 논리로의 전환이란 과거의 군사안보에 편향되어 군사력증대를 통한 제로-섬식의 군사안보로부터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조정과 협력을 통한 논제로-섬식의 복지 안보로의 인식전환을 의미하며 특정 강대국과의 쌍무적 관계를 통한 동맹안보로부터 여러 국가들과의 다자적 관계확립을 통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의 발상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전환과 발상의 전환은 사실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과거 냉전시대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중심적인 전통적 현실주의 시각과는 상이한 안보관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들 간의 자국이익 추구와 전체 공동이익 증진이 근본적으로 상충되어 국제협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현실주의는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자국의 안보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방적인 군사안보의 증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오존층 파괴 및 환경오염, 자원고갈, 핵확산 등등의 공통된 문제는 더 이상 자국이익 중심적인 해결책만이 적절한 안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안보상황에서의 이론적인 도전은 공동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한 여러 국가들이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또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증대된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공동안보라는 개념은 이제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직면하는 위협, 즉 개별국가의 대응능력범위를 초월하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안보도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연결되어 한 국가의 일방적 수단이 아닌 공동된 협력의 수단을 통해 증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sup>32)</sup> 또한,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은 군사안보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복지·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대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군사안보개념이란 너무 협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군사안보이상으로 자국의 국민을 해롭게 하거나 복지에 위협이 되는 모든 환경적 위협, 경제적 박탈, 사회적 위협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이러한 공동안보와 포괄안보의 개념에서 본다면, 특정지역의 안보 증대는 기존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중심적인 논리에서 세계이익(World Interests)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각국의 대외정책도 한 국가의 편협한 국익추구에서 다른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추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각국들이 대외정책의 기초를 자국이익 중심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들의 공동이익 내에서 자국의 이익이 조정되고 수렴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각국의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편협한 국수주의, 적대적 민족주의, 경제적 보호주의, 군사모험주의를 지양하는 원칙이 확립되고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명하고 규범화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준수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4)</sup> 따라서 세계안보론은 각국들로 하여금 유럽의 헬싱키협정과 같은 공동안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천명할 것을 제안한다. 즉 세계안보론은 공동안보의 주요 원칙으로서 ①상호호혜성(Reciprocity)의 인정<sup>35)</sup> ②형평성(Equity)의 추구<sup>36)</sup> ③

32)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논리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안보(World Security)의 개념이나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에 관해서는 Klare, Michael and Daniel Thomas, *World Security: Challenges for a New Century*.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94를 참조.

33) Ibid.

34) Ibid., pp.379~394.

35) 국가들이 상호간에 호혜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행태에 적용하는 기준을

환경유지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의 강조 ④민주화(Democratization)의 확산<sup>37)</sup> ⑤탈군사화(Demilitarization)의 추진<sup>38)</sup> 등을 제기한다. 이런 기본 준칙의 확립을 토대로 세계 공동안보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 일어나야 다자적 협력체의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안보론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느 한 국가가 먼저 나서서 독자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국가와 동시에 국제적 협약을 통해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세계안보론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향후 미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이념으로서 검토할 만한 이념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형평성이나 환경유지성, 민주화확산, 탈군사화 등은 이제 세계적 보편가치로서 우리가 주변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덕목이다.

### 3. 홍익사상에서 시사하는 홍익안보론과 의미

미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이념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대내적으로는 통일한국이 화해·상생을 통한 사회통합과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담보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자협력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세계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통일국가로서의 도덕적 가치의 추구이다. 이런

똑같이 자신의 행위에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Ibid. pp.379~394.

- 36) 형평성의 추구란 지역 간,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보다 기회균등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으로 경제향상과 복지증대를 함께 꾀하며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Ibid. pp.379~394.
- 37) 민주화란 특정국가내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성은 垂直的 책임성과 水平的 책임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수직적 책임성이란 어떤 한 국가의 자국 내에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수평적 책임성이란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도 責任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Ibid. pp.379~394.
- 38) 탈군사화란 地域平和나 安定을 위해 단순한 무기감축뿐만 아니라 각국 간의 관계에서 군사력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국가들의 공격용 군사능력의 감소 뿐만 아니라 분쟁시 協商을 통한 해결과 국제규범의 준수, 나아가 국제법 준수의무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확산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Ibid., pp.379~394.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 민족국가주의로 절대안보차원에서 국민을 강요하고 전쟁으로 내몰며 무조건 타민족을 증오하거나 적대시하며 자국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편애한 현실주의적 안보논리는 더 이상 세계평화를 선도할 통일국가의 안보가치로서 보편성이 없다. 우리가 준비하고 추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이나 방향도 지나치게 우리 민족중심이거나 배타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우리의 주변 및 세계와 소통하며 공감하고 세계역사에 나름대로 의미를 던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선도적이며 귀감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주목한 세계안보론이나 인간안보론이 제시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들과 우리 고대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사상”을 접목시킨다면 비록 시험적인 아이디어지만 다음과 같은 통일한국의 대안안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 홍익이즘(홍익사상)의 검토 및 개념적 발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홍익사상의 핵심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sup>39)</sup> 이러한 홍익사상은 한국인이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고대한국의 시조인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근대한국사회에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이다. 따라서 이 홍익사상은 남북한 공히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온 우리의 유산이자 도덕적 가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 홍익사상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弘益人間’에서 널리 이롭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人’)과 사람(‘人’)이 더불어 사는 (‘人間’)세상, 즉 인간세계를 뜻한다고 한다.<sup>40)</sup> 즉 유교사상으로 대변되는 중국에서는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보다는 각 개인의 인격수양이나 명분을 중시하여 인간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人’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에서 인간이라는 말이

39) 신철균, “홍익이념과 조국통일.”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pp.273~278.

40) 권성아,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1999. pp.182~183.

처음사용된 것은 장자 내편 인간세 제 4에서부터라고 한다.<sup>41)</sup> 따라서 우리 한민족이 단군신화에서부터 ‘人間’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홍익인간’에 있어서 ‘人間’의 뜻은 ‘사람’이 아니라 ‘누리(世)’라는 뜻이며,<sup>42)</sup> ‘弘益人間世’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주는 그 어떤 ‘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에 의하면 홍익인간이란 “널리 누리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은 홍익인간사상을 “홍익인간의 참뜻은 대자연과 인간은 一體이며 서로 조화해서 같이 산다는 뜻이며 인류의 共生을 위한 삶을 뜻한다.”라고 정의한 홍익인간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sup>43)</sup>

또한 여기에서 단군의 홍익인간사상을 실천하는 실천 행동강령으로서 성훈팔리(聖訓八理)를 살펴보면 6가지 인간의 정성과 바른 마음의 실천을 분류하고 있다. 즉 경신(敬神), 정심(正心), 불망(不忘), 불식(不息), 지성(至誠), 대효(大孝) 등이 있는데 이런 여섯 가지의 강령을 토대로 47개의 세분화된 지침이 있다.<sup>44)</sup>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홍익이념에서 나타난 통일이념은 대립보다는 조화를, 대결보다는 화합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정복을 통한 굴복보다는 상대방의 수용 및 포용을 지향하며 물리적 힘에 의한 해결보다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sup>45)</sup>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홍익이념이 제시하는 통일의 방향성은 독립 이후 우리 남쪽에서 추구해 온 통일이념이나 가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우리 통일한국이 지향해야할 미래의 도덕적 가치나 귀감이 될 이념으로서 서구의 어떤 정치사상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홍익인간사상

41) 권성아,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1999. pp.205~213.

42) 위의 책.

43) 홍익인간학회,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pp.357.

44) 이일청, “지성과 정심의 가치 : 단군의 성훈팔리(聖訓八理)를 중심으로.”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pp.280~284.

45) 신철균, “홍익이념과 조국통일.”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pp.273~278.



이 과거 부족국가시대로부터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배달민족으로서 우리 민족고유의 정체성이나 선민의식을 자극하는 부분이 적잖이 있다. 하지만 홍익사상의 기본 요체가 수세기를 뛰어 넘어 “화합과 조화, 평화와 포용, 세계 공동체 이익의 추구”라는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 즉 대내적으로 화해상생을 통한 사회통합과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담보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자협력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세계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통일국가로서의 도덕적 가치 - 로서 충분히 대안이 될 만한 우리 고유의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 (2) 홍익사상이 시사하는 “홍익안보론”의 개념과 의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안보론은 세계 각국들이 편협한 국익중심의 군사안보논리에서 벗어나 함께 직면한 공통된 안보위협에 공동안보로 대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군사안보 영역 이외에 경제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안보를 지향함으로써 세계평화와 번영을 함께 도모하자는 개념이다. 이러한 세계안보의 개념에 있어서 특히, 형평성이나 환경유지성, 민주성, 평화지향성은 이제 세계적 보편가치로서 우리가 주변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가치이자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홍익사상이 시사하는 홍익안보론적 의미가 이러한 세계안보론의 시각과 매우 근사(近似)하다는 것이다. 즉 세계안보론이 주장하는 세계이익(World Interest)이라는 개념자체가 홍익사상이 제시하는 홍익(弘益: 넓게 이롭게 한다) 개념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안보의 시각도 특정국가나 집단 또는 계층의 안위보다는 전체 인간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평화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lt;표 1&gt; 안보론의 형태와 주요 핵심 가치

	현실주의 안보론	자유주의 안보론	세계안보론	홍익안보론
안보위협	군사위협	경제·복지 위협	인간발전 저해요소	인류포함 생태계 파괴
핵심이익	국가이익	공동체 이익	세계이익(인간이익)	홍익(은 누리 이익)
안보형태	군사안보	집단안보	공동안보	지구안보

따라서 이러한 홍익안보론과 기존의 안보론을 비교하면 먼저 현실주의 안보론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의 추구를 강조하는데 비해 세계안보론은 세계이익(World Interests)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고 홍익안보론은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생태계 이익인 홍익(Ecological Interests)의 추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실주의 안보론이 절대안보의 차원에서 군사안보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면 세계안보론은 공동안보의 실현에 중점을 두며 홍익안보는 세계안보론의 주장에 덧붙여 전 지구생태계 안보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즉 선진 통일국가로서 통일한국의 안보적 지향점은 남남갈등의 극복을 시작으로 하여 한반도내 남북갈등 ⇒ 동아시아 지역갈등 ⇒ 세계적 갈등 ⇒ 인류 對 자연생태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생태계 안보론(Ecological Security)은 UNDP가 제안한 인간안보와 세계안보의 범위를 넘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생물의 안전과 보존에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고 보호해야함을 강조하여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 보존 및 유지에 모든 유해한 요소 - 방사능, 생화학무기, 유독가스, 난개발로 인한 산림파괴(Deforestation) 등 생태계 안전의 모든 위험과 위협요소 - 를 제거 또는 폐기하고 지구상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자는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 및 원자로 폐기문제, 국제테러리즘의 근절문제, 전쟁의 폐지문제 등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 지향해야 할 안보과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지역 비핵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sup>46)</sup> 게다가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비핵화를 넘어서 전 지구 무핵화를 제안하여 핵무기는 물론 모든 원자로의 폐기 및 핵물질 폐기로 나아가자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sup>47)</sup>

여기에 덧붙여 홍익사상이 근원적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권옹호 및 보호”도 중요한 외교안보가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sup>48)</sup> 홍익사상은 그 기본원리로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부적 권리로서 인권의 보장을 중요하게 간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권(Human Rights)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매우 광의적이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된다.<sup>49)</sup> 그러나 이미 인간안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전세계 각지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이나 난민학살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비판안보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 인간안보론의 명분이 과연 냉엄한 국제정치현실에서 적실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와 신국제주의(Neo-Internationalism)라는 이름하에 강대국의 약소국 내정간섭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여론이나 국제사회는 인권탄압이나 난민학살문제에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미래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보호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46)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원전을 축소 또는 폐쇄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완전폐쇄를 결정하였으며 멕시코와 일본은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보류 또는 백지화하였다. 이탈리아도 국민투표에서 원전중단을 90%지지로 결정하였다. 『한겨레』 온라인, 2011년 9월 21일,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검색일: 2011년 9월 23일)

47) 세계 4대 에너지원으로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에너지는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그 안전성문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나 지구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점차 세계여론의 힘을 얻어가고 있다.

48) 이일청, “지성과 정심의 가치: 단군의 성훈팔리(聖訓八理)를 중심으로.”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pp.280~284.

49)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3. pp.19~38.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홍익안보차원에서 전개되는 “인권외교와 평화외교”는 미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좌표로서 중심적인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평화외교”와 관련해서는 요한 갈통이 주장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여 구조적 폭력과 탄압의 제거를 지향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 ‘전쟁의 폐지’와 ‘탈군사회’를 함께 천명하고 모든 국가들이 동참하는 인간안보 레짐의 구축에 다함께 나설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평화외교의 핵심이 될 ‘탈군사회’라는 개념이 단지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사용과 역할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평화적 해결과 국제규범의 준수, 나아가 국제법 준수의무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확산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규제 및 개발금지, 무기거래 규제 및 금지, 모든 군사훈련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강력한 안전조치와 함께 탈군사회를 지향하는데 필요한 세계 시민의무와 국가 기본준칙의 확립을 토대로 인간안보에 대한 다자적 국제레짐의 창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sup>50)</sup>

이외에도 국익보다는 홍익(은 누리의 이익)을 강조하고 군사안보보다 지구 생태계안보를 추구하는 외교안보이념으로서 홍익안보론은 또 다른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탐구·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사상이 우리 한민족의 독특한 교유사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주체적 사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이 편애한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 보편적 사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까지를 포용하고 극복하여 미래 한국의 통일이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정치한 통일학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50) Klare, Michael and Daniel Thomas, *World Security: Challenges for a New Century*.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94, pp.380~394.

#### IV. 결론

독립 이후 한국사회는 전쟁과 분단, 독재와 탄압의 어두운 시기를 거쳐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성공의 역사를 쓰면서 한국사회는 세계사에 발전의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쪽인 북한의 낙후된 경제와 군사모험주의로 인하여 지난 60년 간 지속된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며 불확실하다. 냉전동안 잠재해있던 다양한 민족갈등과 분쟁요인들이 종교적 급진주의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주변국가들 간의 군비증강과 해양영토 분쟁 그리고 북한핵문제 등으로 한반도 상황도 여전히 불안과 긴장에 사로잡혀 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주변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 연구는 우리의 통일도 이제 그저 한반도의 지리적인 표현이 아닌, 국경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정서, 그리고 현실 인식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 이 좁은 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이나 현재의 시간대를 넘어서 더 큰 의미로 세계와 소통하고 시대와 공감하며 인류사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의미에 평화와 나눔, 타인에 대한 관용, 물질적 이해관계와 편견을 넘어서 이룩되는 공감의 영역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이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향후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한민족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이념적 정향을 탐구하여 대내적으로는 통일한국이 화해상생을 통한 사회통합과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자협력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세계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통일국가로서 바람직한 외교안보이념

과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시험적으로 제안하는 미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이념으로서 홍익안보론은 이러한 새로운 각성과 성찰의 산물로서 구성주의적 분석의 시도이다. 이제 이 연구를 필두로 하여 기존 통일담론에서 간과되었던 선진국가로서 통일한국의 비전 연구에 후속 연구와 관심의 촉발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성아,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1999.
- 김도태, “통일정당성 근거로서의 비경제적 통일편의.” 『2010 제 3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2010년 11월 30일).
- 김상배,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국가전략』 제 17권 3호, 2011.
- 김학성, “통일세 논의와 통일문제의 공론화.” 『2010 제 2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2010년 11월 5일).
- 라종일, “통일을 보편가치로 승화하자.” 『문화일보』 2004년 3월 11일.
- 로벨 랄프 마이클(Wrobel Ralph Michael), “독일통일의 성과.”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 문정인·이동윤, “남북한 통일의 유형별 시나리오.”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서울: 오름, 2002.
- 박영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설 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한국정치에의 함의.” 『2011 공동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이념의 지형변화와 미래국가비전』, 한국정치학회주최 하계세미나 (2011년 7월 21일)
-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통일.”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 신성우, “홍익인간의 원리.”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 \_\_\_\_\_, “홍익인간의 원리와 그 실천방안.”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 신철균, “홍익이념과 조국통일.”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 얀스 피벨, “화합, 정의, 자유-선물이자 함께 만들어 나가야할 과제로서의 독일통일.” 『통일연구』 제 9권 1호, 2005.
- 양문수, “경제적 차원에서 통일비용과 편익.” 『2010 제 3차 충남평화통일포럼 자료집』, 충남 민주평화통일포럼 세미나(2010년 11월 30일).
- 이근욱,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 이동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2009년 8월 29일).
- 이일청, “지성과 정심의 가치: 단군의 성훈팔리(聖訓八理)를 중심으로.” 『홍익인간학회보 전집』, 서울: 우리출판사, 1983.

- 이태환, “통일한국의 안보외교: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1999.
- 조효제, “독일통일 그 후의 이야기.” 『한겨레 신문』 2011년 2월 25일.
-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
- 한용섭, 『한반도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 허태희, “한반도 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의 국방개혁.” 『국제·지역연구』 제 11권 제 1호, 2002.
- Buzan, Barry, “Changing Paradigm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Planning of Middle Powers.” in *Korean Security Policies Toward Peace and Unification*. Ed. by Hwang Byong-Moo and Han Yong-Sup, Seoul: Doseo Publishers Orum, 2002.
-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3.
- Klare, Michael and Daniel Thomas, *World Security: Challenges for a New Century*.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94.
- Ruggie, John, *Antinomies of Interdependenc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76.



ABSTRACT

A Security Ideology of A Reunified Korea  
: Exploring into a Future Security Value

Huh, Tae-Hoi(Sunmoo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into a security ideology of a future reunified Korea by analyzing a few of security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Despite its devastating war and division into two parts, South Korea has succeeded both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democratization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drawing a lot of praise from the world. However, it has stopped short of achieving its overdue reunification while watching other divided countries like Germany overcome its difficult reconciliation process and move towards one unified nation. Given such devastating Korean war, the long division into two antagonistic entities and the strategic concerns of neighbouring countries with a reunified big Korea, Korea needs to develop more than a narrow ethnocentric reunification theory. If anything, a future korea should prepare a more universal value-oriented ideology like a Hong-ik Ideology, or a korean traditional ideology emphasizing the realization of all the benefits to all the human beings on the earth. Though tentative yet, this study suggests to encompass such humanistic universal values as a world security theory into its security ideology for a reunified Korea.

Keywords : Korean Reunification, Security Ideology, Universal Values, Peace and Prosperity, Hong-ik Ideology, Constructivism

투고일: 2012년 10월 17일, 심사일: 2012년 11월 0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08일